

A Study on the Impact of Perception of Inequality on Perception of State Responsibilit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quality Orientation Perception and Equity Orientation Perception

불평등 인식이 국가책임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평등지향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Youngae Kim¹, Hyunsook Lee²

김영애¹, 이현숙²

¹ Professor, Social Welfare Department,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Korea,
youngae@mail.knou.ac.kr

² Professor, Social Welfare Department,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Korea,
lhs2329@knou.ac.kr

Corresponding author: Hyunsook Lee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how Koreans' perception of inequality affects their perception of state responsibility. It examined whether inequality perception affects equality-oriented perception and equity-oriented perception, and analyzed how inequality perception, equality-oriented perception, and equity-oriented perception play a mediating role in the perception of state responsibility. For this purpose, an online survey of 312 adults aged 18 or older was conducted. In order to identify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tudy variables were verified, and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implemented to verify the path hypothe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of all,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had an effect on the perception of equality orientation, equity orientation, and national responsibility. Moreover, the perception of equality orient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ception of state responsibility. Finally, the perception of equity orientation had an impact on the perception of national responsibility. Consequently, this study has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s policy intervention has needed to reduce inequality. To implement findings, inequality awareness education and value education would be necessary. It has seemed essential to carry out the following studies with a more significant number of participants to generalize the results. Furthermore, the follow-up studies would include subdivided variables for specific policy proposals.

Keywords: Inequality, Equality, Equity, National Responsibility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인들의 불평등 인식이 국가 책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불평등 인식이 평등지향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국가책임성 인식에는 불평등 인식, 평등지향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이 어떻게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18세 이상 성인 3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변인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고, 경로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 첫째, 불평등인식은 평등지향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 국가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평등지향 인식은

Received: October 22, 2022; 1st Review Result: December 02, 2022; 2nd Review Result: January 04, 2023
Accepted: January 31, 2023

국가책임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형평지향 인식은 국가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에 대한 인식교육과 가치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위해서는 세분화된 변수가 포함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어: 불평등, 평등, 형평, 국가책임성

1. 서론

한국의 경제력은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1].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가속화되어 왔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1][2].

불평등의 구조와 불평등 인식이 사회문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국가에 대한 불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야기한다[3-5]. 국가에 대한 불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 형성에도 난관으로 작용한다. 또한 불평등의 심화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며 시민사회의 갈등을 증가시킨다[2]. 국제통화기금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불평등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변수로 보고 있다. 이는 과거 불평등이 성장을 촉진한다는 주장이 퇴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불평등은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평등을 용인하는 모습이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6]. 김태심(2020)은 불평등이 심각함에도 국가에 개입의 요구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가 불평등을 당연하고 공정하다고 믿는 경향이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7].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0년 논란이 되었던 ‘인천국제공항사 정규직 전환’과 ‘공공의대에 대한 의사협회의 대응’을 들 수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취업준비생들은 이를 ‘역차별’로 인식했다. 당시 청년들은 정부의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개입을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는데, 이들은 노력과 능력의 결과로 나타난 불평등과 빈곤은 공정하다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7][8]. 이러한 지향을 형평지향으로 볼 수 있는데 노력과 능력에 따라 결과가 차등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하며 불평등을 용인한다. 이렇듯 불평등의 인식은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형평의 가치를 지향하느냐,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다를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형평을 지향하는 경우 평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평등 개입에서도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7][9]. 권혁용·이현경(2019) 세계가치관조사 6차 조사를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 한국의 경우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수록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에 부정적이었다[9]. 이는 기존의 형평지향 인식이 불평등을 용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김태심(2020)의 연구에서는 능력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경우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재분배 정책을 선호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다[8]. 이 연구 결과는 불평등에 대한 국가적 개입은 불공정하다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강명세(2019)의 연구는 개인책임 등과 같은 노력 보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소득평등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6]. 반면 노력이 아닌 운에 의해 성공이 결정된다는 것을 지지할수록 소득평등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우진(2019)의 연구에서 한국의 경우 소득분배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소득격차를 줄이는 정부의 책임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반면, 노력으로 성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한 경우 정부의 재분배 책임에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았던 것은 유의미하지 않았다[10].

이렇듯, 형평지향 인식은 국가가 개입해 소득재분배를 하거나 소득을 평등하게 하는 정책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평등지향 인식의 경우 소득 재분배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선호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세계가치관조사 6차와 7차 결과, 한국에서 능력과 노력에 따르는 보상인 형평에는 지배적 지지가 나타났으며, 소득평등에 대한 선호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의식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8].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가 능력주의와 반복지적 태도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정운태(2018)의 연구는 재분배 효과성이 강한 국가일수록 불평등 완화에 대한 국가역할 만족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11]. 복지는 불평등에 대한 국가책임이기도 하며 빈곤에 대한 국가책임을 의미한다. 기존의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들은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가질수록 분배에 대한 국가책임인 복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2][13]. 이충환(2015)의 연구는 소득분배 불평등 인식이 복지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세금부담에 대한 불평등인식은 국가책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3]. 경제적 불평등을 인지할수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 개입을 지지한다[14]. 김상돈·박지영(2018)의 연구에서도 불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고, 복지서비스의 정부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15].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느낄수록 복지 확대나 세금 증세를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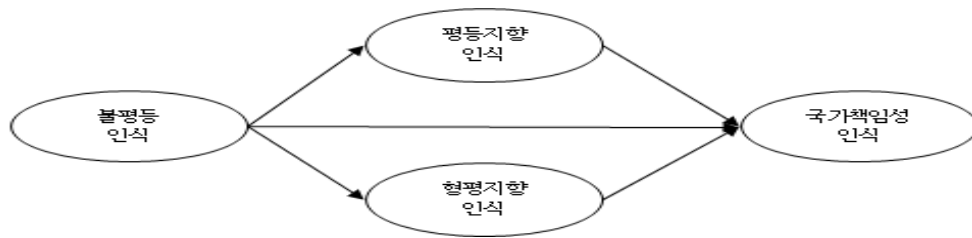
기존 연구들은 결과가 다소 상이하지만, 불평등 인식과 가치관이 불평등에 대한 국가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11][16][17].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국가의 불평등 개입이 요구되어야 함에도 불평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역차별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현대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위기와 위협의 상황에서 한정된 재화와 권력 등의 불평등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불평등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과 평등지향 인식, 불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 시민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불평등에 대한 평등지향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을 비교하거나 평등인식과 형평인식이 국가 개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각각 개별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해 왔다. 또한 불평등 인식이 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미진하였던 불평등 인식, 지향성, 국가책임성 인식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불평등 인식이 평등지향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 중 무엇에 더 큰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국가책임성 인식에는 불평등 인식, 평등지향 인식, 형평지향 인식 중 어떤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책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또한 불평등 인식과 국가책임성 인식에 대해 가치관인식인 형평지향 인식과 평등지향 인식의 매개 역할을 분석한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점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첫째, 불평등 인식은 평등지향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불평등 인식은 형평지향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불평등인식은 국가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평등지향인식은 국가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형평지향인식은 국가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평등지향과 형평지향인식은 불평등 인식이 국가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Study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국내외 패널을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설문 전문업체의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다. 2022년 6월 초 한 주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수집하였다. 조사 대상은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조사방식을 사용하였는데 편의할당추출(convenience quota sampling)에 기반하였다. 또한 일렬 응답이나 불성실한 응답 등은 제외하는 불량 응답 분류 클리닝 작업을 진행하여 유효응답을 추출하였다.

2.2 국가책임성 인식

국가책임성 인식 변수는 단일 문항으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이다. 본 질문은 Svallfors(2004)와 Wong et al.(2008)의 연구에 기반하여 선정된 질문 문항으로 김영순·여유진(2011)의 연구를 비롯하여 복지태도를 주제로 한 여러 연구(이충환, 2015; 박선경·이내영, 2018; 박현아, 2022)에서 활용되었다[3][14][18-21].

2.3 불평등 인식

불평등 인식 변수는 한국복지패널에서 2차·5차·8차·11차 부가조사에서 실시하는 불평등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도구는 KGSS2014(한국종합사회조사)의 특별모듈 조사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 연구에서도 활용되었던 질문 문항으로 [표 1]과 같이 구성되었다. 역문항(1번) 질문을 포함하여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리커드 척도이다. 즉,

불평등 수준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척도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지각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활용되었다[3][14][22].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text{chronbach's } \alpha = .609$ 로 나타났다.

[표 1] 불평등 인식 척도와 조사문항

[Table 1] Recognition of Inequality and Survey Questions

불평등 인식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의 보유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소득차이는 너무 크다”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2.4 평등지향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

평등지향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을 조작화하여 조사한 연구는 이해경 외(1997)의 분배인식에 대한 연구가 첫 시작이다[23].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등과 형평 지향에 대한 인식을 조작화하였다.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대한 태도가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평등과 형평의 원칙을 설정하고 이 원칙에 관련된 질문을 네 가지 복지정책 영역(소득, 의료, 주택, 사회복지서비스)의 구체적인 정책들과 연관시켜 조작화하여 이에 대한 응답으로써 평등지향과 형평지향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해경의 연구에서 조작화되어 활용된 평등지향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의 지표를 바탕으로 남찬섭(1998)은 좀 더 세분화하고 보강하여 조작화를 하였고, 남찬섭의 척도를 천민경(2014)을 비롯한 여러 연구들에서 활용하였다[24][25].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정말 그렇다’부터 ‘절대 그렇지 않다’까지 4점 리커드 척도로 구분하였다. 척도 구성에 따른 조사문항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평등지향 인식 $\text{chronbach's } \alpha = .613$, 형평지향 인식 $\text{chronbach's } \alpha = .619$ 로 나타났다.

[표 2] 평등지향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 척도와 조사문항

[Table 2] Scale of Equality Orientation Perception and Equity Orientation Perception and Survey Questions

평등 지향 인식	복지정책의 목표는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복지혜택은 매우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 미만에 주어어야 한다.
	연금, 잘사는 사람들에게는 보험료 납부액에 비해 적게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보험료 납부액에 비해 많이 주어어야 한다.
	실업보험금은 잘사는 사람에게는 보험료에 비해 적게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보험료에 비해 많이 주어어야 한다.
형평 지향 인식	능력이 부족하고 일을 좀 적게 하더라도 생계에 충분한 임금을 주어어야 한다.
	실업, 재해,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국가에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개인이 대처해야 한다.
	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낸다면 세금 낸 사람들에게 그만한 혜택을 주어어야 한다.
	연금은 전액을 보험료 납부액에 비례하여 주어어야 한다.
	실업보험금은 보험료 납부액에 비례하여 주어어야 한다.
임금은 전적으로 능력과 노력에 비례해야 한다.	

2.5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기본적으로 주요 변수의 일반적 특성과 분석의 타당성을 위한 정규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신뢰도 검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경로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으로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는 측정모델 검증으로 모델 적합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제안모델에서 가설을 검증하고 경로를 파악하여 변수 간 구조 및 경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총 312명으로 남성이 57.7%(180명), 여성이 42.3%(132명)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는 18세 이상~30세 이하 23.1%, 31세 이상~40세 이하 31.4%, 41세 이상~50세 이하 27.2%, 51세 이상~60세 이하 11.5%, 61세 이상 6.7%의 분포로 나타났다. 소득은 300만원 이상 ~399만원 이하가 24.0%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 ~299만원 이하가 20.5%, 100만원 이상 ~199만원 이하가 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59.0%), 고졸 이하 (17.6%), 전문대졸(14.4%), 대학원졸업 이상(9.0%)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행정·사무·관리직(31.1%)이 가장 많았고, 전문·기술·연구직(15.1%), 판매·서비스직(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3]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남	180	57.7	연령대	18~30세	72	23.1
	여	132	42.3		31~40세	98	31.4
학력	고졸이하	55	17.6		41~50세	85	27.2
	전문대졸	45	14.4		51~60세	36	11.5
	대졸	184	59.0		61세이상	21	6.7
	대학원졸이상	28	9.0	전문/기술/연구직	47	15.1	
소득구간	100만원미만	32	10.3	행정/마수/관리직	97	31.1	
	100~199	46	14.7	판매/서비스직	38	12.2	
	200~299	64	20.5	생산/운수/일반노무자	25	8.0	
	300~399	75	24.0	농업/어업/수산업	3	1.0	
	400~499	28	9.0	자영업	18	5.8	
	500~599	29	9.3	대학(원)생	19	6.1	
	600~699	18	5.8	주부	30	9.6	
	700~799	9	2.9	무직	20	6.4	
	800만원이상	11	3.5	기타	15	4.8	

3.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변수는 불평등인식, 평등지향 인식, 형평지향 인식, 국가책임성 인식이다. 각 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불평등 인식은 3.03(SD=.02),

평등지향 인식은 2.41(SD=.02)로 나타났다. 형평지향 인식은 2.63(SD=.02), 국가책임성 인식 .69(SD=.02)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이 2와 4를 넘지 않았다. 이로써 구조모형을 위한 정규분포성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켰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불평등 인식과 국가책임성 인식 간의 상관관계가 .291로 가장 높았고, 불평등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 간의 상관관계가 -.0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평등지향인식과 형평지향 인식 간, 국가책임성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 간에는 상호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국가책임성 인식은 불평등 인식, 평등지향 인식, 형평지향 인식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다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Table 4] Descriptive Statics and Correlation among Variables

	1	2	3	4
1. 불평등인식	1			
2. 평등지향인식	.092	1		
3. 형평지향인식	-.067	-.078	1	
4. 국가책임성인식	.281**	.121*	-.162**	1
평균(표준편차)	3.03(.02)	2.41(.02)	2.63(.02)	.69(.02)
왜도/첨도	.033/-.396	-.076/.309	-.027/.233	-.870/-1.25

3.3 연구모형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기본 측정모델 및 최종측정모델, 제안모델 평가와 수정을 통해 확보된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표 5]와 같다. 기본 측정모델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측정모델을 구성하고 이에 기반하여 제안모델을 채택하기 위한 일반적인 적합도 지수 기준 중 IFI, TLI, CFI는 0.9 이상으로 나타났다. RMSEA는 0.05 이하로 나타났다. 모든 적합도 지수가 매우 적합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수용가능한 자료적합도를 보여주었다.

[표 5]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Table 5] Model's goodness of fit

구분	X ²	p	CMIN/DF	NFI	IFI	TLI	CFI	RMSEA	
측정모델	최초	221.627	.000	3.078	.694	.771	.702	.764	.082
측정모델	최종	69.637	.000	2.321	.850	.909	.858	.906	.065
제안모델		43.008	.035	1.536	.907	.966	.943	.964	.042

아울러, 본 연구의 표본 크기가 N=30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X² 값과 p값의 결과치의 적합도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측정항목들과 개념 간의 비표준화 요인부하값과 다중상관계수는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모수추정치인 요인적재치가 모두 0보다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추정치에 대한 C.R.값(=t값)도 모두 2를 초과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

[Table 6] Factor loading of Measured Variable

변수	측정변수	Estimate	S.E	C.R.	SMC
불평등인식	불평등인식3	1.000*	.042	0.000*	.290
	불평등인식2	1.218	.040	4.363	.477
평등지향인식	평등지향인식4	1.000	.040	0.000*	.502
	평등지향인식3	.844	.044	5.906	.418
	평등지향인식1	.609	.042	5.475	.204
형평지향인식	형평지향인식5	1.000	.039	0.000*	.346
	형평지향인식4	.875	.040	6.200	.249
	형평지향인식3	1.279	.042	7.143	.471
	형평지향인식2	1.088	.044	6.641	.310

* 측정변수에서 모수추정치들 1로 고정시킨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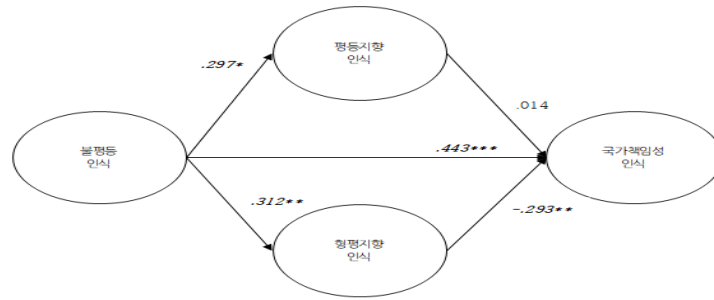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 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불평등 인식이 평등지향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1의 검증 결과, 평등지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 인식의 계수값은 .297, C.R.=2.203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불평등 인식이 형평지향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2의 검증 결과, 형평지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 인식의 계수값은 .312, C.R.=3.013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불평등 인식이 국가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3의 검증 결과, 불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 인식의 계수값은 .443, C.R.=3.648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평등지향 인식이 국가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4의 검증 결과, 국가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평등지향 인식은 계수값 .014, C.R.=.192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형평지향 인식은 국가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5의 검증 결과, 계수값 -.293, C.R.=-2.748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평등지향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은 불평등 인식이 국가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연구가설6의 검증 결과, 형평지향 인식을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효과의 경로가 나타났지만(계수값 -.087)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

[표 7] 가설 검증 결과

[Table 7] Results of Hypothesis Test

경로가설			Estimate	C.R.	p	간접효과	
						Estimate	p
불평등인식	→	평등지향인식	.297	2.203	.028*		
불평등인식	→	형평지향인식	.312	3.013	.003**		
불평등인식	→	국가책임성인식	.443	3.648	.000***	-.087	.140
평등지향인식	→	국가책임성인식	.014	.192	.848		
형평지향인식	→	국가책임성인식	-.293	-2.748	.006**		

*p<.05, **p<.01, ***p<.001



[그림 2] 최종모형 경로계수

[Fig. 2] Final Study Model Path Coefficient

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불평등인식이 평등지향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 그리고 국가 책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평등지향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은 불평등 인식이 국가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22년 6월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1차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 분석 및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변인 간의 가설검증을 위한 경로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모델 적합도를 측정모델 검증을 통해 확보한 후 제안모델에서 가설을 검증하고 경로를 파악하여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첫째, 불평등 인식이 평등지향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정이환(2009), 이중섭(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2][13].

둘째, 불평등 인식이 형평지향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는 불평등 인식이 형평지향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7][9].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 인식은 형평지향 인식의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우명숙과 남은영(2021)와 김태심(2020)의 연구 결과와는 상이했다[7][8].

셋째, 불평등 인식이 국가책임성 인식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충환(2015), 박선경과 이내영(2018), 김상돈과 박지영(2018), 강우진(2019)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하였다[3][10][14][15].

불평등 인식이 형평지향 인식과 평등지향 인식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우리 사회가 불평등 인식은 만연되어 있고 이는 가치지향과 상관없이 불평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평등을 인식하면 할수록 국가책임성 인식이 높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넷째, 평등지향 인식은 국가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성균(2002), 주은선과 백정미(2007), 이중섭(2009)의 연구 결과는 평등주의자들이 국가책임성 인식에 대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13][17][26]. 이 결과는 평등을 지향하나 국가를 불신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형평지향 인식은 국가책임성 인식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명세(2019 권혁용·이현경(2019), 김태심(2020), 우명숙과 남은영(2021), 박현아(202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형평을 지향하는 경우 국가책임성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6-9][21]. 이러한 결과는 불평등에 대한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기존의 공정성 사례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불평등에 대한 국가 개입을 오히려 역차별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여섯째, 평등지향 인식과 형평지향인식은 불평등 인식이 국가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형평지향 인식을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효과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형평지향 인식의 경우 불평등 인식이 국가책임성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각각의 인식이 불평등을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책임성을 매개하지 않는 것은 최근 부동산 정책이나 종합소득세의 증세에 관해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이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 것일 수 있다.

연구 결과 불평등 인식은 평등지향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불평등 인식은 국가책임성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가치관에 따라 불평등에 대한 대응은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평등지향인식은 국가책임성 인식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였으나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형평지향인식의 경우 국가책임성 인식에 대해 부정하는 결과를 뚜렷이 보였다. 이는 한국 사회의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강한 가치판단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재분배 정책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견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즉, 한국 시민들의 형평지향 인식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형평지향 인식이 강할수록 불평등에 대한 국가개입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능력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지향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시도에는 반대하는 이념적 지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누구도 행복하기 어렵고 안전하지도 못하다. 또한 불평등은 한 국가의 성장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불평등은 더 이상 개인적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에 국가 개입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형평지향 인식이 만연한 상태에서 국가 개입정책은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따라서 시민들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국가 개입에 대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불평등과 국가 책임성에 대한 토론과 합의의 구조가 요구된다. 한국의 정책결정 과정은 여전히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 하에서 국가 개입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반발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시민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하며, 시민사회가 서로 합의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한편, 선 국가책임제 후 인식변화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수 있다. 불평등 완화에 대한 국가역할 만족도는 복지지출 수준이 높고 분배 효과성이 높은 북유럽에서 나타났으며, 복지지출 수준이 낮고 재분배 효과성이 약한 남유럽과 동유럽에서는 불평등 완화에 대한 요구는 높았지만 국가 역할의 만족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11]. 이는 제도가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국가책임성의 제도화가 시민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불평등 인식, 지향성, 국가책임성 인식에 대한 통합적으로 접근했고 다차원적으로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더 정확하고 대표성을 가진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후속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평등지향인식과 형평지향인식 변수를 각각 개별 변수로 따로 다루어 볼 필요도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 성별, 세대, 출신 계층, 노동, 이념적 성향 등의 변수에 따라 형평지향과 평등지향 인식이 달라지고 국가책임성 인식에 대해서도 다른 선호도를 보일 것이다. 이를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세금 부담과 복지확대에 대한 변수들을 포함한 연구도 필요하다.

References

- [1] S. A. Kim, 10 years of inequality as an indicator, *Health and Welfare Issue & Focus*, (2021), Vol.409, pp.1-15.
DOI: <http://dx.doi.org/10.23064/2021.09.409>
- [2] J. I. Jo, Assessing the Role of Perception of Distributive Justice on Welfare Policy Preference,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2014), Vol.17, No.2, pp.175-196.
DOI: <http://dx.doi.org/10.15617/psc.2014.12.17.2.175>
- [3] C. H. Lee, A Study on Influences of the Awareness of Poverty Cause and Inequality on Welfare Attitude,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2015), Vol.17, No.3, pp.375-401.
DOI: <http://dx.doi.org/10.22944/kswa.2015.17.3.014>
- [4] S. D. Kim, The Impact of Inequality cognition, Political orientation, and Party support on Political protest: with a focus on Disaffection against State affairs and trust in National institutions, *OUGHTOPIA*, (2011), Vol.26, No.1, pp.141-171.
UCI: G704-SER000012878.2011.26.1.003
- [5] W. J. Kang, The Political Consequence of Citizens' Perceptions of Economic Inequality in Korea: Focusing on Its Effect on the Efficacy of Democracy, *Korea and World Politics*, (2012) Vol.28, No.2, pp.145-175.
DOI: <http://dx.doi.org/10.17331/kwp.2012.28.2.006>
- [6] M. S. Kang, Comparing Preference for Redistribution in East Asian Advanced Democracies, *Asia Review*, (2019), Vol.9, No.1, pp.289-315.
DOI: <http://dx.doi.org/10.24987/SNUACAR.2019.08.9.1.289>
- [7] T. S. Kim, Fair Inequality? System Justification and Redistribution Preferences. *Peace Studies*, (2020), Vol.28, No.1, pp.129-167.
DOI: <http://dx.doi.org/10.21051/PS.2020.04.28.1.129>
- [8] M. S. Woo, E. Y. Nam, Meritocracy as Justice Rule and Inequality Perception: Comparison of Korea and Japan,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2021), Vol.64, No.1, pp.204-244.
DOI: <http://dx.doi.org/10.31930/JAS.2021.03.64.1.201>
- [9] H. Y. Kwon, Jennifer H. Y. Lee, Economic Optimism and Welfare Attitudes: The Case of East Asian Democracies, *Asia Review*, (2019), Vol.9, No.1, pp.265-287.
DOI: <http://dx.doi.org/10.24987/SNUACAR.2019.08.9.1.265>
- [10] W. J. Kang, Perceived Fairness of the Welfare Systems and Democratic Support in Three East Asian Democracies: Comparing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2019), Vol.25, No.2, pp.29-58.
DOI: <http://dx.doi.org/10.19067/jgs.2019.25.2.29>
- [11] Y. T. Jung, A Comparative Study on Welfare Regimes and Welfare Attitudes: Focusing on Satisfaction and Needs of the Role of Government for Inequality Reduc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018), Vol.49, No.2, pp.211-232.

DOI: <http://dx.doi.org/10.16999/kasws.2018.49.2.211>

- [12] E. H. Jung, Korean Workers' Perception of Just Distribution of Wages and Its Determinants,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2009), Vol.15, No.1, pp.191-220.
DOI: <http://dx.doi.org/10.17005/kals.2009.15.1.191>
- [13] J. S. Lee, Th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on welfare attitudes, *Social Welfare Policy*, (2009), Vol.36, No.4, pp.73-99.
DOI: <http://dx.doi.org/10.15855/swp.2009.36.4.73>
- [14] S. K. Park, N. Y. Lee, How does Economic Inequality link to Individual Preference on Welfare Policy? A Typology of Welfare Policy Preference Formation in Korea, *Journal of Contemporary Politics*, (2018), Vol.11, No. 3, pp.5-32.
DOI: <http://dx.doi.org/10.52594/jcp.2018.12.11.3.5>
- [15] S. D. Kim, J. Y. Park, The Impact of Inequality cognition on Government Responsibility of Welfare Service: With a focus on Universal Welfare and Selective Welfare, *Journal of Public Society*, (2018), Vol.8, No.2, pp.5-35.
DOI: <http://dx.doi.org/10.21286/jps.2018.05.8.2.5>
- [16] S. J. Jang, Perceptions of Social Fairness and Korean Attitudes toward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 *East and West Studies*, (2017), Vol.29, No.2, pp.67-89.
- [17] S. K. Lee, The Characteristics and the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2002), Vol.36, No.2, pp.8-24.
UCI: G704-000210.2015.26.1.006
- [18] S. Svallfors, Class, attitudes, and the welfare state: Sweden in comparative perspective,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2004), Vol.39, No.2, pp.119-138.
DOI: <https://doi.org/10.1111/j.1467-9515.2004.00381.x>
- [19] T. K. Wong, S. P. Wan, K. W. Law, Welfare Attitudes and Social Class : the case of Hong Kong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008), Vol.18, pp.142-152.
DOI: <https://doi.org/10.1111/j.1468-2397.2008.00576.x>
- [20] Y. S. Kim, E. G. Yeo, Koreans' welfare attitude – Focusing on the inconsistency and insignificance of class difference in welfare attitude, *Economy and society*, (2011), Vol.91, pp.211-240.
UCI: G704-000107.2011..91.003
- [21] H. A. Park, Fairness Perception regarding Income Inequality among Young People – Focusing on the Diversity of Unequal Relationships, *Economy and Society*, (2022), No.135. pp.278-313.
DOI: <http://dx.doi.org/10.18207/criso.2022..135.278>
- [22] H. N. Lee, M. R. Lee,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Welfare Attitudes of Korean: Analyzing Effects of Equity Percep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10), Vol.30, No.2, pp.254-286.
DOI: <http://dx.doi.org/10.15709/hswr.2010.30.2.254>
- [23] Hyekyung Lee, Kim Han-Joong, Park Kyung-Suk, Yoo Geon-Young, Ha Seong-Gyu, Dongbae Kim, Leek Seop, Kihwan Kim, Kim Jae-Yeop, Choi Jae-Sung, Yoo Tae-gyun, Nam Chanseop, Seonhee Choi, Kim Dong-Ju, Donghun Kim, Kim Jinwook, Park Ji-Young, Lee Jeonghwa, Joo Eun-Soo, Suyeon Heo, Distributive Justice and Social Welfare 1st Year Research Report Summary of Results,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1998)
Available from: <http://www.riss.kr/link?id=E684652>
- [24] C. S. Nam, Distributive justice of the welfare state, Yonsei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1998)
- [25] M. K. Chun, A Study on the Preference of Distributive Justice and the Evaluation of Distributive System in Korea –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unfairness as an intermediate effect, Hansung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4)
- [26] E. S. Joo, J. M. Baek, Class, Public Welfare Experience and Welfare attitud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007), No.34, pp.203-225
DOI: <http://dx.doi.org/10.16999/kasws.2007..34.203>